

검찰개혁 차질없는 추진... 인적 쇄신으로 정국 조기 수습

법무부-검찰 갈등·부동산 정책 표류에 지지율 하락... 분위기 쇄신 연초 '중기' 박영선·'산자' 성윤모·'노동' 이재갑 장관 교체 가능성

靑 개각 배경·2차 개각 전망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30일 추미에 법무부 장관의 후임으로 민주당 박병계 의원을 내정하는 등 2차 개각에 나선 것은 조기 레임덕(임기말 권력누수 현상) 가능성을 차단하고 '검찰개혁'의 차질없는 추진을 통해 국정 주도권을 놓지 않겠다는 의지가 담긴 것으로 풀이된다. 또 노영민 대통령 비서실장과 김상조 정책실장, 김중호 민정수석 등이 이날 동반 사의를 표명한 것도 내각과 청와대 비서진의 전면적 인적쇄신을 통해 어수선한 정국을 조기에 수습하고 집권 5년 차 안정적인 국정운영이 필요한

상황이라는 점을 반영하고 있다. 이를 반영하듯, 정만호 청와대 국민소통수석은 이날 브리핑을 통해 "국정 일선의 계기로 삼아주기 바란다"는 의미에서 사의를 표명한 것"이라며 "국가적으로 어려운 시기에 대통령이 백지 위에서 국정 운영을 구상할 수 있도록 물러나겠다는 뜻을 밝힌 것"이라고 설명했다. 문 대통령도 청와대 수석들의 사의 표명에 "속고하겠다"고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따라 연초 또 한 차례의 개각과 함께 청와대 비서진 개편이 맞물리면서 연쇄적인 인적 쇄신이 불가피할 것으로 예측된다. 그동안 검찰 개혁과 맞물려 조국-윤석열, 추미에

-윤석열 등 법무부와 검찰의 소모적 갈등이 이어져 오는 가운데 코로나 3차 대유행과 백신 공급 지연 논란, 부동산 정책 표류 등과 같은 악재가 맞물리면서 문 대통령의 지지율은 하향곡선을 그려왔다. 이런 가운데 법원의 윤 총장 징계 집행 정치 결정은 문 대통령의 인적 쇄신을 촉발시켰다는 분석이 나온다. 국정 장악력 강화를 위한 인적쇄신 카드로 쓸 수밖에 없었다는 것이다. 이런 가운데 연초 교체 가능성이 있는 장관으로는 내년 4월 서울시장 보궐선거 유력 후보인 박영선 중소벤처기업부 장관과 성윤모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 등 장수 장관들이 꼽힌다. 또 개각 수요가 있는 부처인 박양우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김현수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등도 거론된다. 청와대 비서진 개편에서 관심의 초점은 노영민 비서실장의 후임 인사다. 사실상 '마지막 비서실

장'이 될 인물은 대선을 치러야 하고 다음 정부로 권력 이양을 해야 하는 책임도 맡게 된다. 특히, 집권 마지막 비서실장은 전통적으로 측근 중의 측근이 기용됐다. 김대중 대통령은 박지원 현 국정원장을 마지막 비서실장으로 선택했고, 노무현 전 대통령의 마지막 비서실장은 문재인 대통령이였다. 양정철 전 민주연구원장, 우윤근 전 주러시아 대사, 이홍철 전 민정수석 등이 유력 후보로 거론되는 이유다. 이들 외에는 최재성 청와대 정무수석과 김부겸 전 행정안전부 장관 등도 하마평에 오르고 있다. 문 대통령은 인적 쇄신을 통해 차질없는 검찰 개혁을 추진하는 한편, 코로나 3차 대유행 조기 진압을 통해 국정 주도권을 살려 나갈 것으로 보인다. 우선 공수처장 후보자로 판사 출신 김진욱 헌법재판소 선임연구관을 지명하고 판사 출신 박병계 더불어민주당 의원을 법무부 장관에 기용한 것은 검

찰 개혁의 고삐를 늦추지 않겠다는 의증으로 읽힌다. 공수처의 신속한 출범을 위해 선임 법무부 장관과 초대 공수처장이 호흡을 맞춰달라는 의미도 담긴 것으로 분석된다. 남은 임기 동안 수사권과 기소권을 분리하는 등 추가적인 조치로 검찰 권력을 견제하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려는 뜻으로 볼 수 있다. 여기에 지난 29일 문 대통령이 미국 제약사 모더나의 CEO와 화상통화를 통해 백신 공급에 합의를 이룬 것도 코로나 3차 대확산을 막기 위한 문 대통령의 의지가 반영된 것으로 풀이된다. 정치권 관계자는 "문재인 정파는 성패는 결국 K-방역의 성공 여부에 달렸다"며 "문 대통령은 개각과 비서진 개편을 통해 통해 분위기를 쇄신하고 검찰 개혁과 K-방역을 통해 정국 주도권을 마지막까지 행사하려 할 것"이라고 말했다. /임동욱 선임기자 tuim@kwangju.co.kr



與 검찰개혁특위 "검찰 권한 근본적 수습" 더불어민주당 윤호중(가운데) 검찰개혁특위 위원장이 30일 국회에서 검찰개혁특위 운영방향 및 향후 계획에 대한 기자간담회를 하고 있다. /연합뉴스

이낙연 "국민의힘, 중대재해법 처리하자"

민주·국민의힘 대표 회동...李 "김종인, 영수회담 긍정적"

더불어민주당 이낙연 대표와 국민의힘 김종인 비상대책위원장은 지난 30일 회동을 하고 중대재해기업처벌법(중대재해법) 제정안 처리와 관련해 의견을 나눴다. 이 대표는 이날 오후 비공개 회동 직후 기자들과 만나 "중대재해법을 회기 내 합의 처리하자고 부탁했다"며 "김 위원장은 법 성격상 의원입법보다는 정부입법이 낫고, 정부안을 토대로 의안을 절충해 가면 될 것"이라고 말했다고 전했다. 김 위원장의 반응이 처리를 돕겠다는 것으로 해석하느냐는 질문에는 "그런 셈"이라며 "3주째 희생자 가족이 단식 중인데 빨리 끝내시도록 노력하자는 부탁을 드렸고 김 위원장도 고개를 끄덕였다"고 설명했다. 이 대표는 또 4·3 특별법, 아시아문화전당조성 특별법, 생활물류서비스산업발전법, 가덕신공항 특별법, 공직자이해충돌방지법, 국회 이해 충돌

방지를 위한 국회법 개정안의 조속한 처리를 김 위원장에게 요청했다. 이와 관련, 김 위원장이 국회법 개정안에 대해 "의원들이 합리적으로 판단할 문제로, 전부 법으로 정해야 하느냐"라는 반응을 보였다고 이 대표는 전했다. 김 위원장은 이 대표에게 당을 온화하고 합리적으로 이끌어 달라고 주문하며, 특히 민주당 의원들의 감정적인 법안 발의를 자제시켜 달라고 요구했다고 한다. 이에 이 대표는 "잘 알겠다. 법안 제출도 책임 있게 하도록 당부하겠다"고 말했다고 전했다. 이 대표는 김 위원장에게 문재인 대통령과 일대일로 만나는 신년 영수회담을 제안했고, 김 위원장은 "만나서 할 일이 있으면 만나겠다"며 긍정적인 반응을 보였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이달 중순 공수처 출범... 권력기관 개혁 속도낸다

인사청문회→인사위 구성→수사처 검사 임명... 권력기관 개혁 '속도'

30일 문재인 대통령의 김진욱 헌법재판소 선임 연구관에 대한 초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처장 지명으로 공수처 출범이 본격화 한다. 내년 1월 공수처 출범을 목표로 조속한 관련 법안 처리 등의 중요성을 강조했던 문 대통령으로서 처장 지명을 통한 권력기관 개혁에도 속도를 낼 것으로 예상된다. 청와대는 김 후보자의 지명 사실을 발표하면서 공수처를 통한 권력기관 개혁의 방향을 제시했다. 청와대 핵심관계자는 이날 "김 후보자가 중립성을 지키며 공수처가 권력형 비리에 대한 성역 없는 수사, 인권친화적 반부패 수사 기구로 자리매김하는 데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여권이 추미에 법무부 장관과 윤석열 검찰총장

간 갈등을 계기로 검찰개혁에 대한 강력한 의지를 다지고 있는 만큼 청와대는 검찰을 비롯한 권력기관을 견제하는 데 공수처 역할의 방점을 찍을 것으로 보인다. 문 대통령도 지난 15일 국무회의에서 '1호 공약'인 공수처 출범을 두고 "모든 권력기관이 견제와 균형의 원리에 의해 작동되고 오로지 국민을 섬기는 기관으로 거듭나는 초석이 될 것"이라고 역설한 바 있다. 특히 김 후보가 판사 출신이라는 점에서 반드시 검찰을 개혁하겠다는 문 대통령의 강력한 의지가 담긴 인사라는 해석이 나온다. 문 대통령은 다양한 법조계 이력을 쌓은 김 후보자가 중립성과 권력기관 간 균형을 확보하는 데 적임이라고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

청와대 핵심관계자는 "김 후보자는 판사와 변호사, 현재 선임법원연구관 외에 특검 특별 수사관 등 다양한 법조 경력을 가진 만큼 전문성과 균형감, 역량을 갖췄다고 봤다"고 전했다. 김 후보자는 국회의 인사청문회를 거쳐 임명된다. 다만 공수처장 후보 추천 등을 놓고 여당과 갈등을 빚은 국민의힘이 반대 입장을 밝힌 만큼 청문 과정이 순탄치 않을 것이라는 관측도 제기된다. 국민의힘 주호영 원내대표는 전날 원내대책회의에서 "대통령이 한 사람을 지명하겠지만 이 추천 과정 전체를 인정할 수 없다"며 "공수처 출범을 최대한 저지하겠다"고 했다. 정치권과 법조계에서는 진통 끝에 청문 절차가 마무리되고 나면 인사위원회 구성, 수사처 검사 임명 등을 거쳐 내달 중순에 공수처가 출범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오광록 기자 kroh@연합뉴스

민주 '윤석열 탄핵론' 여진

지도부 "논의 부적절"... 일부는 "당론 채택해야"

더불어민주당 내에서 '윤석열 검찰총장 탄핵론'을 둘러싸고 여진이 이어지고 있다. 지도부가 의원총회에서 "현 시점에서 논의하는 것은 부적절하다"라고 제동을 걸었지만, 강경파는 "탄핵 불씨가 살아있다"며 언제든 추진하겠다는 입장이다. 김두관 의원은 매일 같이 '윤석열 탄핵'을 요구하는 목소리를 내고 있다. 김 의원은 지난 30일 페이스북 글에서 "왜 두 손 다 있으면서 한 손으로만 싸우자고 하나"라며 "검찰 기소권을 완전히 박탈하는 개혁과 함께, 대통령과 헌법에 저항하는 윤석열 탄핵을 같이 해

야 한다"고 탄핵 당론 채택을 주장했다. 김 의원은 "검찰총장이든 대법원장이든 정치 중립을 위반하면 국회가 탄핵한다는 선언을 해야 한다"면서 "국민의힘이 가장 겁내는 무기, 당이 하려는 제도개혁의 축진제, 서울-부산시장 승리의 열쇠, 국민 지지를 회복할 유일한 카드가 윤석열 탄핵"이라고 역설했다. 김용우 의원은 YTN 라디오에서 "윤 총장의 위법 행위들이 인정되고 있기 때문에, 원칙적으로 탄핵 요건을 갖췄다"면서 "공정적, 적극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조합원님과 함께한

광주문화신탁 창립 27주년

광주대표 서민금융 협동조합으로 거듭나겠습니다!

아파트담보대출

아파트 감정시세

최고 70~80%

추가신용대출 상담가능

담보대출

시세 80%까지

법인 100억

개인 50억 가능

각종 부동산담보(아파트, 주택, 상가, 빌딩, 대지, 전·임, 담야 등) 및 신축자금(시설자금) 등

상생협력대출금

*** 사회적 경제기업

대출금리 **2.28%**

대출대상 (예비) 사회적기업, (사회적)협동조합, 마을기업, 자활기업

정부보증 햇살론대출

근로자 최대 **1,500만원**

(근로자 금액한도 기준 1,000만원에서 1,500만원으로 확대지원)

자영업자 최대 **2,000만원**

광주광역시 북구 첨단연선로 91번길 20-4

☎ 1644-7990

관내본점 266-4150 문흥본점 266-4150	양산지점 573-4150 화정지점 573-4150	운암지점 528-4150 운암지점 528-4150	매곡지점 572-4150 매곡지점 572-4150	침단지점 576-4150 침단지점 576-4150	운암산지점 513-4150 운암산지점 513-4150	동광주지점 264-4150 동광주지점 264-4150
--------------------------------	--------------------------------	--------------------------------	--------------------------------	--------------------------------	----------------------------------	----------------------------------